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광주서도 전세사기 피해 속출

20~30대 108건으로 82% 차지...보증금 1억 이하 67% 달해 국토부 피해자 78명 인정...우선매수권 등 지원 등 대책 마련

광주에서도 20~30대 청년층과 보증금 1억원 이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정부는 관련 심의를 통해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총 광주에서는 78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132건 신청을 받아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토부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78

명은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요청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보증금 반환 가능 6건, 미반환 의도 없음 4건, 다수 피해 발생 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 22건으로, 이번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

나머지 32건은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신청 취하 1건 등이다.

광주시에 신청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지역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밀집해 있는 광산구로 91건(69%)이 집중됐으며,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 108건(82%)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1억원 이하 89건(67%), 1억~2억원 이하 38건(29%) 등으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현운 광주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 시민은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우선매수권 행사, 구입자금 대출, 지방세 감면 지원)와 계속 거주 희망자(우선매수권 양도 통한 공공임대 거주, 저리 대환대출 지원), 신규 전세희망자(저리 전세대출,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긴급 주거지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공통 지원으로는 경·공매 대행서비스, 경·공매유예 중지, 조세채권 안분, 긴급복지지원요청,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각종 법률 지원 등이 제공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판결 2題

‘여수 금오도 아내 사망’ 남편 보험금 12억 받는다

대법 “고의 살해 단정 못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여수 금오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한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50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경 여수시 남편 금오도 인근 선착장에서 부인 B씨(당시 47)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상태를 확인한다며 경사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차량 변속기를 중립으로 둔 것이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A씨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 됐지만, 2심에서는 현장감식 등의 증거로 차량을 밀지 않아도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과실만을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여긴 것이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유족들 “면죄부” 규탄

세월호 참사 당시 조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



인쇄 도구 한자리에 시민들이 2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2회 서남동 인쇄 굿즈데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버스 기다리다 날벼락

경찰 꿈꾸던 보성 16살 여고생 70대 운전 승용차에 치어 사망

경찰관을 꿈꾸던 16살 여고생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70대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보성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경 보성군 별교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서 있던 A양을 치어 숨지게 한 B(76)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는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A양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뒤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며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차량 브레이크 페달 작동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버스정류장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닥치는 영상을 확인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며 “평소 책 읽기, 글 쓰기를 좋아하는 등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딸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어했다”고 실제 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고현장에서도 A양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고당시 충격으로 버스정류장의 시설이 모두 부서져 공터만 남겨진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화 한 송이가 놓여져 있었다.

사고현장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박모(43)씨는 “끔 많은 어린 학생이 불행한 사고를 겪게 돼 마음이 좋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문 닫을 위기

정부 예산 삭감에 시, 인력 줄여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데 이어 광주시도 예산을 줄이고 운영인력을 줄인 데 따른 것이다.

2일 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고

운영 인력 5명 중 2명을 해고했다”면서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망은 더 취약해졌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올해 광주 지역 청소년 중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0%에 달하는 등 청소년 노동 현실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광주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